

본문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2】청구항목별로 기사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1. 매체유형별로 청구항목과 피해유형은 어떠한가?

2-2. 연도별 청구항목은 어떠한가?

2-3.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신청인유형, 의견제시유형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된 제주지역 모든 매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재위에 접수된 제주지역 매체의 조정신청건수는 175건이었으나, 실제 기사 수는 129건이었다. 이는 하나의 기사에 병합청구가 이루어졌거나, 동일 매체의 동일 기사가 다른 신청인에 의하여 청구된 경우를 하나의 기사로 집계한 결과이다.

분석대상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의 협조를 받아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 조정신청사건기록에 첨부된 해당 기사를 근거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 1989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사는 일부가 '중략 및 후략' 되어 있어 해당 매체 전문(全文)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2) 측정항목

연구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측정항목은 ①매체유형 ②기사유형 ③신청인 유형 ④기사의 중심주제 ⑤정보인용 유형 ⑥기사의 보도행태 ⑦청구항목 및 피해유형 등 크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가. 매체유형

매체유형은 제주지역에서 발행되는 매체를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인쇄매체는 발행주기에 따라 일간지, 주간지, 월간잡지로 구분하였다. TV는 제주지역 지상파 3사인 KBS제주, 제주MBC, JIBS와 케이블방송인 KCTV를 포함하였다. 인터넷신문은 제주의 소리, 제주투데이 등 독립형과 인터넷 제주일보, 인터넷 한라일보 등 종속형을 함께 포함하였다. 하지만 언론사명 분류에서는 인터넷 제주일보와 인터넷 한라일보는 각각 제주일보와 한라일보에 포함시켰다. 포털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제공받아 기사를 게시하는 포털사를 말한다.

나. 기사유형

기사유형은 언론중재위 연차보고서 분류기준에 따라 스트레이트, 사실, 논단·칼럼, 인터뷰, 외부 필자기고, 비평, 탐사·심층·기획보도, 만화·만평, 사진, 통계표, 가십, 기타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다. 신청인유형

신청인 소속 유형은 언론중재위 연차보고서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 회사, 이익단체(일반단체 포함), 국가기관, 지방정부(지방공공기관 포함), 교육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기타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는 직업 유형에 따라 일반인,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자영업, 단체장, 선출직의원, 회사원, 문화체육예술인, 이장, 학생, 기타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라. 기사의 중심주제

중심주제는 분석대상 기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정치, 정책(행정 포함), 경제, 환경, 교육, 여성, 복지, 의료, 범죄(사고·재난 포함), 문화, 스포츠, 연예·오락, 인물·미담·동정, 종교, 역사,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도기사의 경우에는 제목과 리드(lead)에 나타난 행위주체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핵심주제를 선택하게 된다(고영철·최낙진, 2006).

마. 정보인용유형

정보인용 유형은 '정보인용 출처'와 '정보제공자의 실명·익명 여부', '직접 인용의 유형(이준웅 외, 2007)' 등을 참조하여 '정보원(原) 활용 출처', 정보원(原)이 사람인 경우의 '실명·익명 처리 여부',

‘직접 인용의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정보원(原) 활용 출처(정결진, 2008)는 기사에서 정보원(原)으로 활용한 출처의 숫자와 그 현황을 측정하였다. 정보원 활용 출처 수는 기사에서 정보원(原) 활용 출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음’으로, 한 곳이면 1건으로, 두 곳이면 2건으로 집계하였다. 활용 출처는 정보원이 사람인 경우는 사람, 기관명만 밝힌 경우는 기관, 보고서 등 자료에 의존한 경우는 자료, 이들 출처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온 기사는 그 경우의 수를 밝혀 적었다.

정보제공원(原)의 실·익명 여부는 정보제공원(原)이 사람인 경우로만 제한하여 그 실명의 공개 정도 및 표현 여부에 따라 완전실명, 지역과 성명, 성명, 암호형인용, 완전익명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완전실명은 정보제공원(原)의 실명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기사를 가리키며, 완전익명은 ‘주민들에 따르면’ 식으로 정보제공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과 성명은 ‘한림읍 이모씨’, 성명은 ‘이모씨’, 암호형인용은 ‘A씨’ 식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직접인용의 유형은 제목에 따옴표(“ ”) 문장이 있는가를 판단한 것으로 ‘있다’와 ‘없다’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제목에 따옴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내용이 본문 내용에 있는 인용인지의 여부에 따라 ‘완전일치’와 ‘부분일치’, ‘완전불일치’로 분류하였다.

바. 기사의 보도행태

기사의 보도행태는 기사가 일정한 견해나 관점 혹은 편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리드(lead)기사 가치 부여 여부’, ‘보도태도’, ‘의견제시 유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리드기사의 가치 사용 여부는 리드기사의 서술어가 기자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였다(고영철·최낙진, 2006). ‘있다’로 분류한 기사는 “--헌선이 초래되고 있다”,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와 같이 기자의 주관과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기사들이다. ‘없다’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결과를 발표했다”와 같이 객관적 상황을 그대로 전달한 기사를 가리킨다.

보도태도는 제목과 리드기사를 중심으로 기사의 내용이 ‘긍정적·호의적’, ‘중립·양비론’, ‘비판적·부정적’ 인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의견제시 유형은 기사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상반되는 의견이 담겨있는 기사는 ‘상반의견제시형’으로, 상반된 의견 없이 어느 한 쪽만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는 ‘일방의견제시형’으로 분류하였다.

사. 청구항목 및 피해유형

청구항목은 언론중재위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회복 방법에 따랐다. 단일청구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이며, 병합청구로는 정정+반론, 정정+손배, 추후+손배, 정정+반론+손배로 하였다.

한편, 청구항목 추이 변화에 관한 측정항목으로는 피해회복 방법에 따라 보도형청구와 손배형청구로 재분류하였다. 정정, 반론, 추후는 단일청구이든 병합청구이든 그 피해회복 방법이 보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도형청구로 명명하였다. 또한 손배는 단일과 병합에 상관없이 그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에 반드시 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배형청구로 명명하였다.

피해유형은 언론중재위의 '잘못된 보도의 유형' 분류에 따랐다. 한 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 없이 전달하는 경우는 '허위보도', 전체 사실 중 부정적인 일부분만을 부각한 경우는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확장하여 전달하는 경우는 '과장보도', 수사결과 발표 전 범죄 혐의자를 범인으로 보도된 경우는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 보도'이다. 또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영상) 보도',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침해 보도', '인명, 지명, 통계 수치, 단어(표현)를 잘못 기록한 보도', '필자의 허락 없이 원래의 뜻과 다르게 글을 고쳐 표현한 보도' 등 9가지로 분류하여 피해유형을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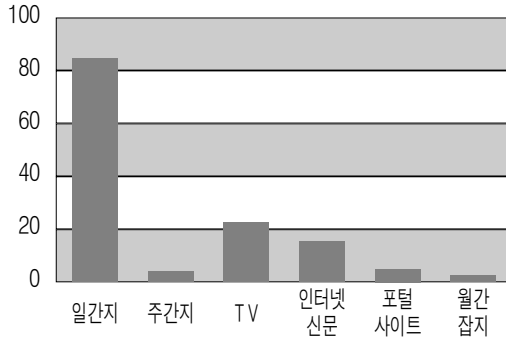
3) 코딩절차

연구자가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대학원생 1인과 함께 미리 작성된 코딩지침에 따라 129개 기사 전수를 코딩한 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코더 간 신뢰도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4) 그래프로 본 측정항목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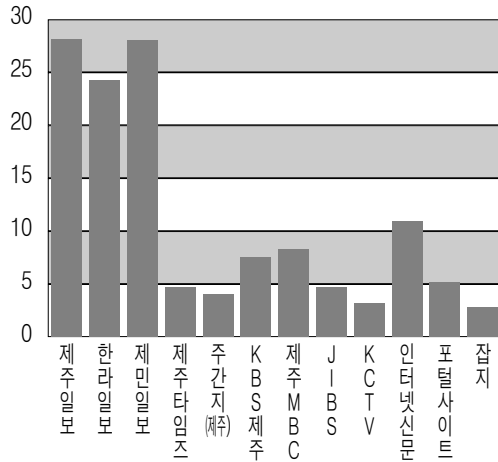
이 연구의 일반적 개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측정항목별 빈도분석을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그림 1> 매체유형



매체유형별로 보면 일간지 82건(63.6%), TV 23건(17.8%), 인터넷신문 14건(10.9%), 포털사이트 5건(3.9%), 주간지 3건, 월간잡지 2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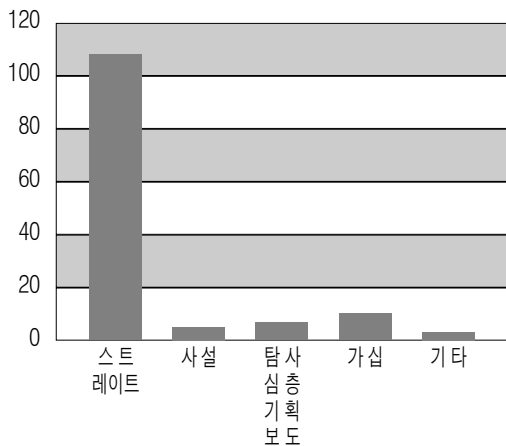
<그림 2> 언론사명



언론사 개별 매체 현황은 제주일보 28건(21.7%), 제민일보 28건(21.7%), 한라일보 24건(18.6%), 제주MBC 9건(7.0%), KBS제주 8건(6.2%), JIBS 4건(3.1%), 제주타임즈 4건(3.1%), KCTV 2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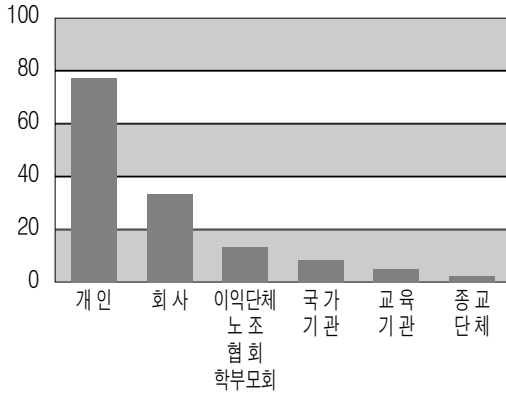
또한, 인터넷신문 전체로는 12건이지만 이 가운데 5건은 제주의 소리이다.

<그림 3> 기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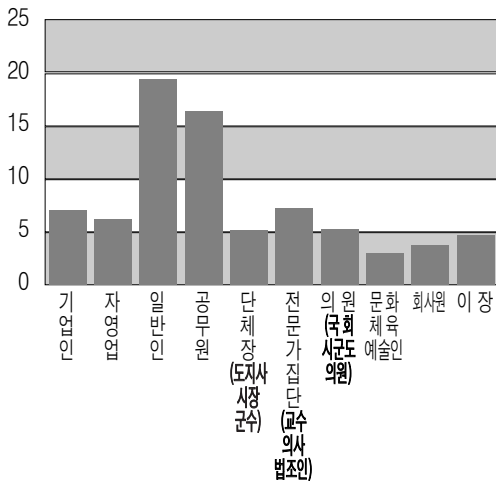
기사유형은 스트레이트 108건(83.7%), 가십 10건(7.8%), 심층기획 6건(4.7%), 사설 3건(2.3%)이며, 기타 2건은 월간잡지이다.

<그림 4> 신청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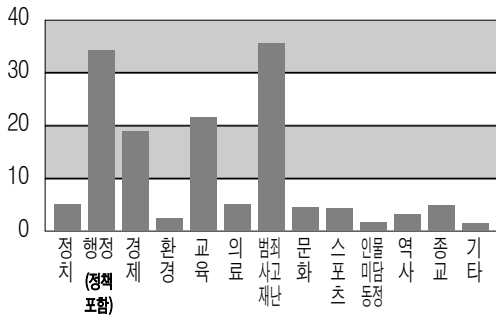
신청인은 개인 79건(61.2%), 회사 32건(24.8%), 이익단체/협회 11건(8.5%), 국가기관 4건(3.1%), 교육기관 2건, 종교단체 1건이다.

<그림 5> 개인 직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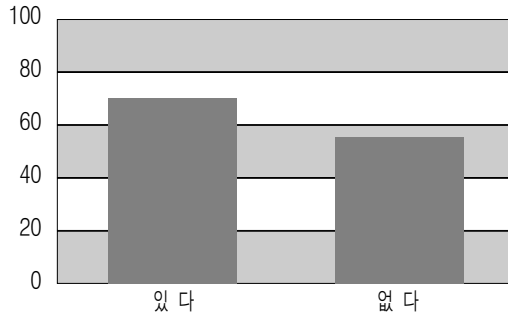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직업 유형은 일반인 20건(15.5%), 공무원 17건(13.2%), 전문가 8건(6.2%), 기업인 7건(5.4%), 자영업 6건(4.7%), 단체장 5건(3.9%), 선출직 의원 5건(3.9%), 이장 5건(3.9%), 회사원 4건(3.1%), 문화체육예술인 2건이다.

<그림 6> 중심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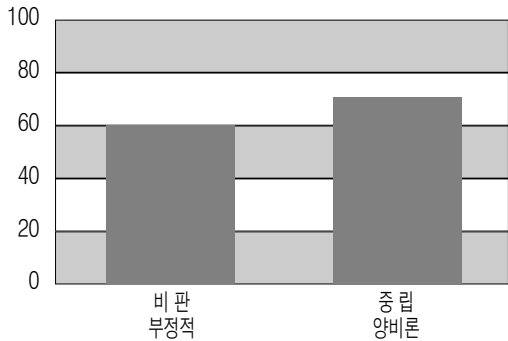
중심주제로 보면, 범죄/사고 33건(25.6%), 행정/정책 32건(24.8%), 교육 21건(16.3%), 정치 5건(3.9%), 의료 5건(3.9%), 종교 4건(3.1%), 환경 2건, 문화 2건, 스포츠 2건, 역사 2건, 미담/동정 1건이었다.

<그림 7> 기사(리드) 가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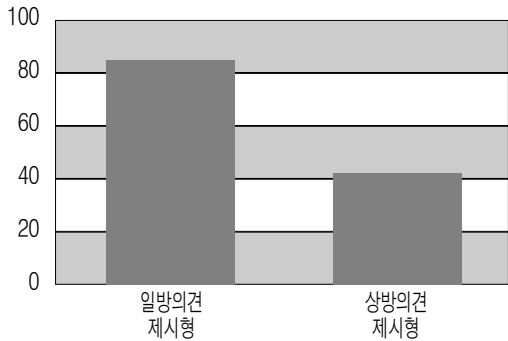
129건의 기사 가운데 71건(55.0%)에서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는 등 리드기사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림 8> 기사(리드) 보도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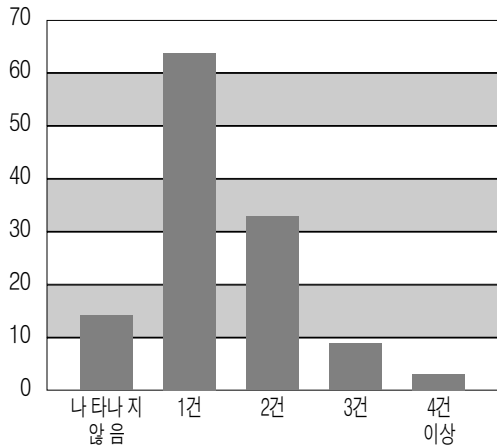
129건의 기사는 중립/양비론 69건(53.5%), 비판/부정적 60건(46.5%)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의견제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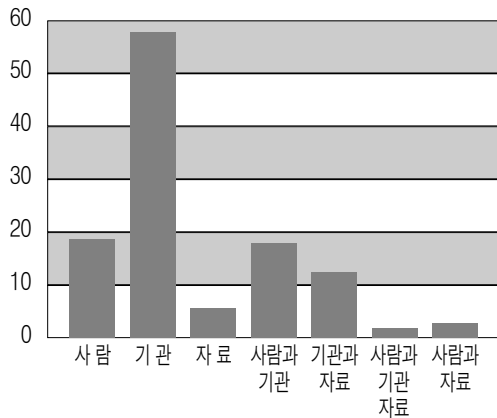
129건의 기사는 일방의견제시형 86건(66.7%), 상방의견제시형 43건(33.3%)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정보원(原) 활용 출처(사람, 기관, 자료 포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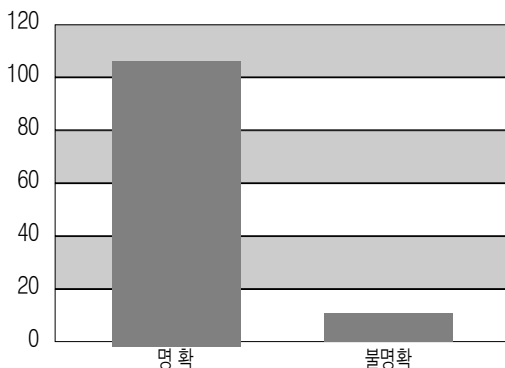
정보원(原) 활용 출처 수는 1개 64건(49.6%), 2개 35건(27.1%), 3개 12건(9.3%), 4개 이상 4건(3.1%)이었다. 정보원 활용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기사는 14건(10.9%)이었다.

<그림 11> 정보원(原) 활용 출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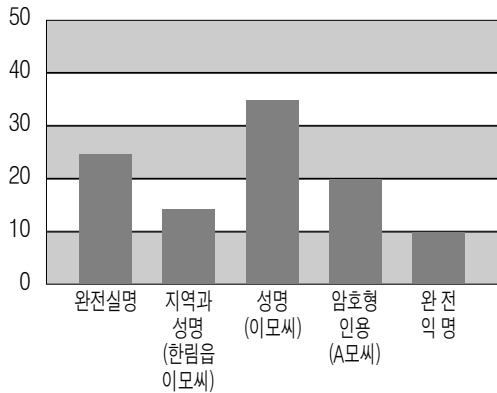
정보원(原) 활용 출처 유형은 기관만 인용한 기사가 58건(45.0%), 사람과 기관 19건(14.7%), 사람만 18건(14.0%), 기관과 자료 11건(8.5%), 자료만 5건(3.9%), 사람과 자료 3건(2.3%)이었다. 정보원 활용 출처가 나타나지 않은 14건은 결측 처리 하였다.

<그림 12> 정보인용 출처 명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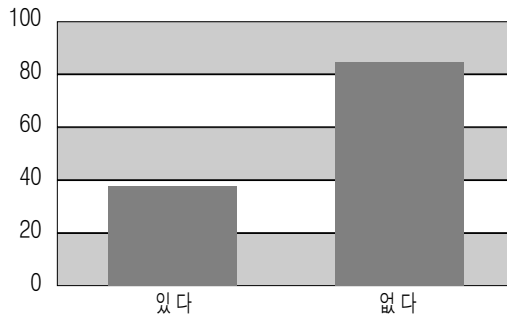
정보인용 출처가 명확한 기사는 104건(80.6%), 불명확한 기사는 11건(8.5%)이었다. 정보인용 출처 유형 가운데 사람을 정보원(原)으로 활용한 사례에서 불명확한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사람만 정보원(原)으로 활용한 기사 18건 중 6건은 정보인용 출처가 불명확하였다. 정보원 활용 출처가 나타나지 않은 14건은 결측 처리 하였다.

<그림 13> 실명·익명 처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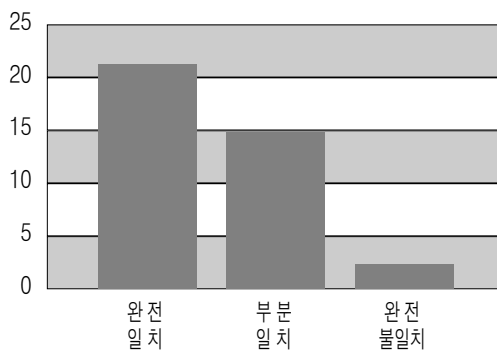
정보제공원(原)이 사람인 경우, 실명·익명 처리 유형은 성명만 35건(27.1%), 완전실명 26건(20.2%), 암호형인용 20건(15.5%), 지역과 성명만 15건(11.6%), 완전익명 10건(7.8%)이었다. 사실 등 23건의 기사는 실·익명 처리를 판단할 수 없어 결측 처리 하였다.

<그림 14> 제목 따옴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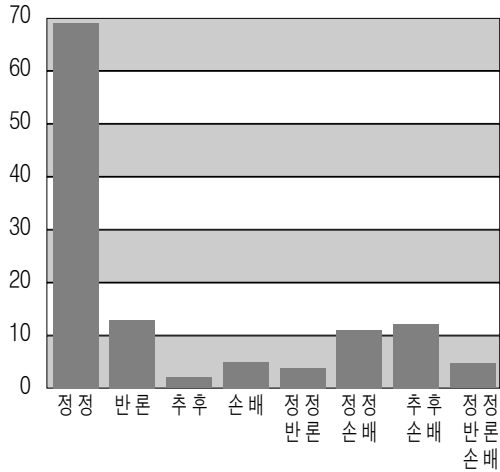
분석대상 기사 전체 129건 중 제목 따옴표 (“ ”)가 있는 기사는 39건(30.2%)이었다.

<그림 15> 제목인용 본문일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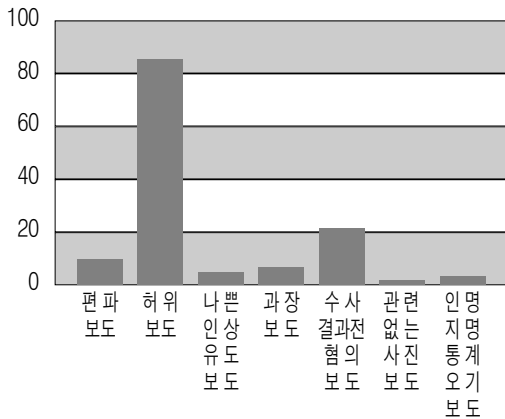
제목 따옴표가 있는 39건의 기사 가운데 제목과 본문이 완전일치한 기사는 22건(56.4%), 부분일치 15건(38.5%), 완전불일치 2건(5.1%)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청구항목



단일청구로는 정정 70건(54.3%), 반론 14건(10.9%), 손해 6건(4.7%), 추후 2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병합청구로는 추후+손해 16건(12.4%), 정정+손해 13건(10.1%), 정정+반론+손해 5건(3.9%), 정정+반론 3건(2.3%) 순이었다.

<그림 17> 피해유형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보도 86건(66.7%), 수사결과 전 혐의보도 22건(17.1%), 편파보도 10건(7.8%), 과장보도 4건(3.1%), 나쁜 인상 유도보도 3건(2.3%), 인명/지명/통계 오기보도 3건(2.3%), 관련 없는 사진보도 1건이었다.

4. 연구결과

1) 연도별 기사건수 변화 및 청구 매체유형 특성

(1) 기사건수

198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언론중재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조정청구는 175건이며,